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21. 8. 5(목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도시경제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윤의식, 사무관 박선용, 박정현, 주무관 김재준 • ☎ (044) 201-4097, 3737, 487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

< 관련 보도내용 >

- ◆ (SBS, 8.5) “주먹구구 스마트도시 사업...감사원, 국토부·LH에 주의 요구”
 - LH 사업지구 58곳 중 34곳의 실시계획 미수립
 - 준공된 지자체의 인수인계 거부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방치
 - 서비스 구축 등 운영실태나 활용률을 검토하여 보완대책 마련
- ◆ (연합뉴스, 8.5) “스마트도시 사업 엉망...LH, 58곳중 34곳 실시계획 누락”
 - LH 사업지구 58곳 중 13곳은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및 34곳은 실시계획 누락, 감사원은 국토부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 주의 요구

□ 감사원이 금일 발표한 ‘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실태’ 감사에서 지적한 사업지구들은

- 국가시범도시 등 전면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라, LH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교통·방범 CCTV 등의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사업들입니다.

<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개요 >

- (배경)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한 개선대안 도출
- (감사기간) '20.12.7~'21.1.29
- (감사내용) LH가 시행한 74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적정성
- (감사대상)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지구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.

1)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등 부적정 관련

○ 스마트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의무 사항은 아니나, 스마트기반시설 설치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시에는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다만,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을 하지 않았으며, 이에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토록 통보하였고,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.

2)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 지연 관련

○ 「스마트도시법」에 따라, 실시계획 수립, 준공검사, 기반시설 인수 인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반드시 구성·운영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였고

-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절차, 기준 등을 관련 지침(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)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입니다.

3) 통합플랫폼 재난상황 영상지원, 사회적 약자관리 서비스 실적 저조

○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5대 연계서비스*는 현재 108개 지자체에 보급되어 운영 중이며, 사업성과 조사(21.6, 건축공간연구원) 결과, 주민인식도 91%, 지역안전기여도 70%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* 112 관제센터 및 출동 영상지원, 119 출동 영상지원, 재난상황 영상 지원, 사회적약자 관리

○ 이번에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된 재난상황 지원 서비스는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(안산·부천·제주시 등)의 사례를 공유하고,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,

- 사회적약자 서비스는 별도 단말기를 보급하는 방식에서 휴대폰을 활용하는 등 보다 쉽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□ 이번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성과창출과 확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.

○ 세종, 부산에서 조성 중인 국가시범도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연말에 부산 시범도시에 첫 입주(스마트빌리지)할 계획입니다.

○ 기존도시 45곳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 중에 있으며, 한국판 뉴딜을 통해 108개 지자체에 통합플랫폼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선용, 박정현 사무관(☎ 044-201-4097, 37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